

민주 “선거 부정·국헌 문란 ‘땃글 내란’” 수사 촉구

‘리박스쿨’ 여론 조작 의혹 제기
“어린 학생 상대 교육내란 시도”
“국정조사 등 총동원 진상규명”
이재명 “국헌과 확실한 연관성”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땃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국헌 문란 땃글 내란 사건”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긴급 본부장단 회의에서 “불법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이번 사건을 우리는 선거 부정 땃글 내란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이명박(MB) 정부 국정원 땃글 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합판이라 할만한 심각한 충격적인 국헌 문란 사건”이라며 “리박스쿨의 땃글 조작팀은 ‘자손군’ (땃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이 아닌 ‘자해 손가락 군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잔당 선거공작지지도단 단장을 맡은 정성호·박선원 의원이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땃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악한 범죄행위를 삭주굴근(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파낸다는 뜻)의 자세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당에도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리박스쿨에서 돌봄 교사 양성을 방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땃글을 쓰게 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행위를 과연 누구 때문에 했으며, 그 행위가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이

재명 후보를 비방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엉터리 회견도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는 흉악하고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내에 리박스쿨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이 권한대행의 정책자문관이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도 이날 “땃글조작은 민심과 진실을 왜곡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내란세력이 땃글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마까이 드러났다”며 “내란 증식을 위한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의힘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함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리박스쿨에 자신의 머느리 양메리 씨가 강사로 있었던 전광훈 목사는 물론, 늘봄학교 확대를 공약한 김문수 후보 역시 리박스쿨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광훈-김문수-리박스쿨의 검은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땃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편향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생각까지 조작하려 한 건 단순히 민간 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있는지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용태 “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돼야”

이총 총의 모아 비대위서 공식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이같이 썼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유지했으나 ‘찬성’ 이발

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탄핵안은 가결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았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화하겠다”며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중단없는 개혁을 약속드리며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는 정당으로 빠르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사퇴…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1일 후보직 사퇴 및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고발한 민주당 ‘무고’ 맞고받

“TV 토론 발언, 사실로 드러나”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받았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현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 표현을 인용해 썼고, 이후 해당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땃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노태약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부실관리 송구” 사과

“원인·책임 소재 밝힐 것”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대선) 사전투표 날(29~30일)에 있었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김용태 사무총장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사과한 것이다.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배우자 대리투표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서울 12%… 광주·전라 21%

지역 간 불균형 지속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해서 감소하고는 있으나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다.

수도권은 10%대 초반인 반면 전라도와 제주에서는 20%를 넘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은 2021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표본 추출한 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외상학회(JKMS)에 발표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 진료 체계의 핵심 지표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노 위원장은 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지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 투표원(투표관리관)들에 대한 협박, 폭행, 사무실 무단침입(이 있었고), 또 그로 인

해 상해를 입은 직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직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국내 외상 사망자를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울산·경상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표본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정 센터장의 연구는 네 번째 조사다.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13.9%였다.

조사 첫해인 2015년 30.5%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조사에선 2017년 19.9%, 2019년 15.7%였다.

5개 권역 중에서는 인천·경기가 10.2%로 가장 낮았다. 2019년 13.1% 대비 2.9% 포인트 줄었다.

그다음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2019년

20.4%에서 2021년 12.4%로 8%포인트 감소했다. 부산·대구·울산·경상은 같은 기간 15.5%에서 13.6%로 줄었다.

반면 광주·전라·제주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1.1%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제주는 지난 2015년 40.7%, 2017년 25.9%, 2019년 17.1% 등 줄어들다가 2021년 소폭 올랐다.

대전·충청·강원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9년 14.7%에서 2019년 15.8%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외상센터 도입 등으로 2015년 30.5%였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2021년 13.7%로 감소했다”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외상 치료 시스템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